

연구보고서

2

##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 개발 연구

우리 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 개발 연구’ 용역사업을 2001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행하여 12월 중순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널리 도서관계에 알려 향후 지속적인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국립중앙도서관의 허락을 받아 이 연구결과의 결론부분을 본지에 재수록한다. • 편집자 주

· 연구책임자 : 이웅남(한성대) · 연구원 : 곽철완(강남대), 김태승(경기대), 남태우(중앙대), 이웅훈(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협력망의 현황과 수준을 조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협력망 운영은 매우 미비하거나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의 서비스 능력이 크게 부족한 탓이다. 즉, 장서나 시설, 예산, 직원 등 모든 면에서 자관의 서비스 요구에도 제대로 응할 수 있는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타 도서관의 서비스 협력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절대 수가 크게 미흡해서 도서관간 지리적 간격도 도서관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도서관 기반조건의 절대적 미비로 도서관협력망의 활성화와 장래 발전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또한 현재 그 어떤 협력사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도서관들의 현실적 조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들의 효과적 실행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도서관협력망을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고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목적달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이지 못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도서관협력망 운영에 있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사업들의 추진에 앞서 개별 도서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지 않고서 계속적으로 법적 근거를 앞세워 도서관협력망의 현재와 같은 사업방식을 그대로 지속할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물론 도서관 정책 전반에 대한 일선 공공도서관들의 지지와 협력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협력망 강화의 기반조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에 있어서도 장서개발과 시설 보완이나 협력망 사업을 담당할 직원 확충 등의 기반조건 개선과 정비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도서관협력망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기반조건 강화 문제는 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대학, 학교, 전문과 특수도서관 등 궁극적으로 도

서관협력망에 포함되어야 할 모든 관종의 도서관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이 함께 관심과 지원책을 강구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과에서 도서관협력망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조직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협력망의 원활한 구축과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칭)도서관망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하나의 협력망으로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개별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최대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협력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나 체제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이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에서도 사업비, 넓게는 자료 구입비까지도 포함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협력망에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협력망 사업을 단순한 행정행위로만 그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협력망 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도서관협력망 사업의 일환으로 전환하여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협력망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당장 활용하기 어렵다면, 현재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 자료 구입비와 도서관 건립비 등의 재원을 도서관협력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재원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기반조건이 어려운 많은 공공도서관이나 타 관종 도서관들을 도서관협력망으로 묶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법적인 기반도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8장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협력망 조항을 상징적인 조항으로만 남겨두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개별 도서관들이 자관의 능력이나 필요, 또는 지역적 협력의 필요에 근거해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에도 여러 가지 협력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물품관리법이나 자료의 폐기·이관에 관한 법적 기반의 정비, 저작권법 등에서 관련 조항을 가능한 한 도서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장서개발이나 상호대차 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거나 폐지 또는 정비해야 한다.

지역단위의 협력망 조직은 현재와 같이 도서관협력망과 도서관정보망의 이중적인 구조를 정비하여 협력망으로 일원화하고, 그 구조도 가급적 6개의 광역단위와 그 아래 4개 정도의 권역별 협력망 체제로 간소화하여 도서관협력망 참여의 강제성을 완화하면서도 실제 필요에 의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6개 광역단위 협력망에는 도서관협력기구를 설치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해당지역 대표도서관과의 행정적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도서관협력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력을 포함한 구체적 지원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현재 공공도서관협력망에서 추진하고 있는 8가지 사업

을 좀 더 세분하고 구체화하여 모두 14가지의 표준적인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14가지 표준사업도 사실상 도서관들의 개별적인 능력이 강화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반조건이 구비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 실현가능성이나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서관협력이란 결국 개별도서관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 참여가 절대적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표준사업을 제시하는 하되 그 참여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도서관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대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표준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조건들을 정비하고 완비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종합목록 작성사업을 위해서 각종 편목관련 표준화라든가, 현재 구축하여 운영 중인 KOLIS-NET과 같은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책임진다는가, 아니면 주제별/지역별 서지목록 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만이 도서관협력망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제반 조건의 절대적 미비로 인해 그러한 조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우리나라 현실에 기인한다. 특히 현장 도서관에서 형식적인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현재까지도 특별한 협력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험에 의해 도서관협력망의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수립이 실천성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타 관종으로의 확대를 포함한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은 가능한 한 연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협력망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산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과제이다. 우선 예산규모를 측정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각종 협력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물론 공동목록 작성과 같은 사업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상호대차나 공동보존, 인력교류 등 거의 모든 표준사업을 구상하고 소요예산을 계상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는 구할 수가 없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불확실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규모를 책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공공도서관 사업이 자치사업의 하나로 대부분의 도서관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규모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현 도서관 상황에서는 도서관협력망 구축·운영이나 협력사업 추진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며,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도서관들간의 협력은 궁극적으로 도서관들이 자관의 목적 달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개선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도서관협력망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열린 자세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개별 공공도서관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일과 행정체계가 다름에 따른 사회문화적,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는 등의 기반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법적, 제도적 정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